

청년 안정적 정착 · 새로운 내일 응원

전주시, 20일까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 청년 모집

전주시가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활력수당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과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먼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업과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전주시 청년 1318명에게 생애 1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

등록상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18세~39세)으로, 도내에서 농업과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30%)과 지역화폐(70%)로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 전주 등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구직활동 비용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을 돕고, 사회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이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18세~39세)으로, 시는 올해 879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50만 원씩을 최대 6개월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50%)과 지역화폐(50%)로 수당을 받게 되며, 이를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가 사업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취·창업 성공 인센

티브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당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대영 전주시 청년활력과장은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전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가 새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생들을 찾아가 청년정책을 홍보했다.

'전주시 청년정책' 홍보 · 현장 소통 나서

새학기 개강 맞아 전북대 · 전주대 등서 홍보부스 운영

전주시가 새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생들을 찾아가 청년정책을 홍보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3일~5일)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3일~4일)에서 전주시 청년정책을 알리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전주시 청년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전북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및 전주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했으며, 청년 당사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전주시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시는 3일간 운영된 팝업 부스를 통해 각종 행사 및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창구인 청년인재DB(청춘전집)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 및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청년문화예술 페스티벌'과 '청년 면접장 무료 대여자업' 등 대학생 맞춤형 사업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 청년 온라인 플랫폼 '청정지대 (youth.jonju.go.kr)'와 청년센터 '청년이음전주'를 소개하는 등 맞춤형 정책 안내로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권희성 기자

여름철 홍수기 대비 하천 안전 점검 나서

전주시, 자연재해 사전 대비 강화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에 대한 홍수기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전주시역 32개 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하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시간당 강수량 100mm 넘는 집중호우·발생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

상이 일상화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하천 제방 및 호안 시설 상태 점검 △하상 퇴적물 및 유수 흐름 저해 요소 확인 △배수통문, 수문 등 하천시설물 작동 상태 점검 △하천 내 불법 점유물 및 적치물 정비 △홍수취약지구 점검·조치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산책로·운동기구·편의시설 파손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 및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기

전까지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하천 내 쓰레기 투기 및 불법 경작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퇴직도 및 지장수목 제거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하천유지보수 매뉴얼에 따라 하천의 통수기능을 저해하거나 제방 훼손을 초

래하는 퇴직도·지장수목은 적기에 제거해 시민의 안전과 재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전주시 주요 하천 일대 지속적인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달부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천 일대 하도정비(퇴직도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공무원과 시민단체, 하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현장을 확인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환경강사 대상 역량강화교육 운영

전주시는 5일 전주시니어클럽 교육장에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앞두고 환경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전주시니어클럽 소속 환경강사 15명을 대상으로 총 2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날 첫 교육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운영 현황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이론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2일차 교육에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소각



장, 리사이클링타운, 매립장)를 직접 방문해 시설별 운영 실태와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는 현장 체험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을 수료한 환경강사들은 오는 4월부터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본격 투입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간담회 가

전주시와 전북국방벤처센터(센터장 최석구)는 5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방위산업 활성화와 협약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84개사 대표와 임직원, 협약기업 협의회 회장단(회장 박연욱)이 참여해 기업 간 교류 확대와 공동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사는 △협약기업 협의회 추진성과 안내 △방산업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 국방벤처지원사업 소개 △중소기업 사이버침해(해킹메일) 예방 및 대응 방안 △협약기업 우

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방위사업청 지원사업과 2026년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의 국방시장 진입과 사업확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최근 증가하는 해킹메일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역량을 키워 기업 보안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주)바르텍시너지의 방산육성지원사업 선정과 (주)음도원의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등 협약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시와 전북국방벤처센터는 지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